

육아정책 소식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 개통

교육부는 11월 20일(월),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을 개통한다고 발표했다.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은 교육 3주체(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교육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공간으로, 교육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현장 교사와 부총리가 함께 만드는 교육정책'에 이어 마련되었으며, 이를 통해 현장과 정책 부서 간 소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함께학교」는 인터넷·이동통신에서 '함께학교(<https://www.togetherschool.go.kr>)'로 검색·접속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회원가입 및 간단한 실명 인증 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교육부는 다수의 구성원이 동의하고 지지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책임 있는 답변과 정책 반영을 통해 제안자의 정책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함께학교」가 자생적 소통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국에서 선발된 365명의 현장 교사지원단을 중심으로 플랫폼을 운영한다. 이번 개통으로 교육정책 제안 기능을 우선 제공하고 2024년 2월 말까지 정보 나눔, 상담 기능 등의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사용자 경험(UX)을 토대로 메뉴나 기능을 지속 개편하여 이용자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함께학교」 플랫폼에 토론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현장교원과의 대화에서 제안된 정책과제, 추진 상황 탑재 및 정책환류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저출산·지역소멸 등 사회난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학계가 힘을 합친다

교육부는 12월 4일(월), 코리아나 호텔에서 「2024년 사회정책 방향 모색: 교육의 힘으로 사회난제 해결」을 주제로 사회정책 분야의 6개 주요 학회와 함께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023년 사회정책 공개토론회는 사회문제가 복잡해지고 증거 기반의 정책 수립이 중요해짐에 따라 ‘데이터’를 대주제로 기획되었다. 특히 교육부와 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세 차례 토론회 논의를 마무리하며, 2024년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아울러 저출산, 지역소멸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학회 소속 연구자들의 실제 수요를 바탕으로 향후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실증연구를 추진하고, 이를 사회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정책화할 계획이다. 공개토론회에 관심이 있는 국민은 교육부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접속하여 시청할 수 있으며, 발제 내용은 행사 종료 후 사회정책 누리집 (<https://www.socialpolicy.go.kr>)에 탑재되어 있다.

유보통합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현행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교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여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정과제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이하 유보통합)을 추진해 왔다. 과거 유보통합 정책은 그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보육 사무와 교육 사무의 주관 부처가 분리된 상태에서 여러 의견을 조율하는데 한계를 드러내며 최종적인 실현에 이르지 못하였다.

대통령은 지난 2023년 6월 15일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목표로 하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교육부는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순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하고 유보통합을 실현하는 단계적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는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사무 주관 부처를 교육부로 단일화하여 유보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단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유보통합을 실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되면, 6개월이 경과한 2024년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여 이관되는 업무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 및 조직 개편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

모든 국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교육부는 작년 8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하면서 희망하는 모든 국민이 디지털 역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부터 평생교육까지 디지털 교육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우선 초·중등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2022년 겨울방학부터 현재까지 1년간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디지털새싹 캠프를 운영해 오고 있다.

디지털새싹 캠프는 전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민간·공공기관이 전문적인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체험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코딩, 인공지능, 데이터 등 최신 기술과 디지털 사회의 쟁점(이슈) 및 디지털 융합 문제 등을 다루면서 컴퓨팅 사고력, 자기 주도성, 협업 능력 등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20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310개의 운영기관이 22,600여회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였고, 총 38만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특히, 도서벽지, 다문화배경, 특수아동, 학교 밖 청소년 등 디지털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도 약 3만여 명 참여하였다. 디지털새싹 캠프를 통해 학생들의 디지털 소양, 컴퓨팅 사고력, 데이터 소양, 인공지능 소양이 향상되었으며, 특히 인공지능(AI) 소양 향상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사교육 경험이 없는 학생들과 읍면 지역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력이 크게 향상되어 사교육·지역에 따른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월부터는 겨울방학 디지털새싹 캠프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공교육 내에서 코딩, 인공지능 등 디지털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디지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디지털 교육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17회 아동학대예방의날 기념식 개최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11월 17일(금) 오후 2시에 서울 가든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 「제17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올해 17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며 부모와 자녀 간 상호 소통과 이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양육 방법인 ‘긍정 양육’ 문화의 확산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 긍정 양육 129원칙〉

(기본전제) 자녀는 존중받아야 할 독립된 인격체
(실천원리) 부모 자신과 자녀의 이해에서 시작, 서로에 대한 믿음 갖기
(실천방법) 자녀 알기, 나 돌아보기, 관점 바꾸기, 같이 성장하기, 온전히 집중하기, 경청하고 공감하기, 일관성 유지하기, 실수 인정하기, 함께 키우기

기념식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회복을 위해 힘쓴 개인과 기관·단체를 선정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124점이 수여되었다. 유공자 표창 수여 외에도 2023년 하반기 공익광고 영상 상영, 각계 대표자들이 참석한 ‘긍정양육 퍼포먼스’ 시연 등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현장의견 청취

보건복지부는 12월 7일(목) 오후 1시 30분, (☎)사임당유니온를 방문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직후,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양육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 신생아 양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산모는 주소지의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를 발표한 바 있다. 2024년부터는 지역별 상황에 맞게 세쌍둥이 이상 다둥이 가정에 대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인원과 기간을 확대·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예방 당부

보건복지부는 12월 6일(수), 최근 유아·학령기 아동 중심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증가에 따라 17개 시·도를 통해 관할 어린이집에 해당 감염병 정보와 호흡기 감염증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제4급 법정 감염병에 해당하며, 주로 소아 및 학령기 아동, 젊은 성인층에서 유행하는 폐렴의 흔한 원인이 되는 감염병이다.

해당 감염병은 같이 생활하는 가족이나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로부터 전파가 일어나므로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등원을 자제하고 집에서 휴식할 것이 권고되며, 미등원 시에도 법정 감염병에 따른 불출석에 해당되어 출석일수로 인정된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어린이집에서부터 해당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지하고 호흡기 감염증 예방을 위한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 질병관리청 정보자료와 예방 수칙을 배포하고 개별 시설에서 호흡기 예방 수칙 준수 등 감염증 예방을 위해 신경써 줄 것을 요청하였다.

부모, 사업주, 국민 상호 존중을 통한 양육친화환경 조성 캠페인 전개

보건복지부는 12월 27일(화) ‘노 키즈 존(No Kids Zone)’ 사업장의 실태조사를 공개하고, 아이가 건전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양육친화문화 조성을 위한 “아이를 대하는 ON도 높이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8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노 키즈 존 운영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 점과 제20회 아동총회에서 아동대표 100명이 모여 채택한 결의문의 첫째 조항으로 “아동을 차별하는 노 키즈 존 철폐”를 결의한 것을 계기로, 노 키즈 존에 관한 실태 및 인식, 시사점을 얻기 위해 실시하였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인터넷 공시 등을 통해 파악된 노 키즈 존 사업장 558개 중 현재 노 키즈 존을 운영 중이며 조사에 협조한 사업주 20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① 노 키즈 존 사업장 업종은 커피/휴게음식점업, 제과점업이 76.1%로 가장 높았고, 음식점업이 18%로 뒤를 이었다. 노 키즈 존의 주된 운영 이유로는, 안전사고 발생 시 업주 배상책임부담이 과도해서 68%, 아동의 소란행위에 따른 다른 손님과 마찰 때문에 35.8%, 조용한 가게 분위기를 원해서 35.2%로 나타남.
- ② 노 키즈 존 중단을 위해 도움이 될 조치나 혜택으로 공공장소에서 보호자 책임 강화 및 홍보가 71.4%로 가장 높았고, 그 외에 배상책임보험 지원, 아동친화적 리모델링 지원 등의 의견이 있었음.

이번 조사에서는 부모와 사업주 대상 심층집단면접(FGI)도 수행하였다. 부모들은 노 키즈 존에 대한 견해로 모든 아이를 출입 금지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과, 예절 없이 행동하는 부모나 아이를 본 적이 있어 사업주 입장을 이해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노 키즈 존에 대한 관리 방향으로 규제 등 강제적 개입보다 인센티브 지원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아동친화 환경조성을 위해 양육친화문화 확산 캠페인 활동, 아동 안전시설 확보, 부모의 양육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다.

〈 공공장소 내 양육친화문화 조성을 위한 행위자별 행동양식 〉

(1) 아이·부모님	(2) 사장님·직원	(3) 다른 손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님은 아이에게 외출 전 지켜야할 공공예절 설명해주기 • 아이가 예절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기 • 아이가 다른 사람에 실수했다면 아이 행동을 멈추고 사과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른, 아이 등 다양한 손님의 방문을 환영해주기 • 아이들이 다니기 위험한 공간은 위험 등 안내 표시해주기 • 아이와 아이 동반손님의 도움 신호에 귀를 기울여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를 동반한 가족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기 • 아이들의 아이다운 모습이나 실수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기 •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먼저 공공예절을 준수하기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보건복지부는 12월 29일(금)에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개정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은 ▲보육료 지원 단가 인상,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신규 도입, ▲토요일 근무수당 신설 등 예산 확대를 반영하는 한편, ▲질병·부상 및 부모의 출산 시 출석인정특례 적용일수 확대,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인가증 대표자명 변경절차 완화 ▲보수교육과정 개편 내용 수록 등 보육사업 추진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지침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전자파일 형태로 배포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주요 개정 내용 〉

구분	내용
보육료 지원 단가 인상	0~2세반 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 단가 5% 인상 반영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신설	민간·가정어린이집 0~2세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정원대비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연령반별 1개반에 추가 지원
토요일 보육교사 근무수당 신설	토요일 보육교사 근무수당 신설
대도시, 중소도시 어린이집 원장 인건비 지원기준 완화	원아 감소는 놓여준 뿐 아니라 전반적인 현상임을 고려하여, 대도시, 중소도시에도 '현원 11인 이상'이면 지원(단일 기준)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부여 대상 추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은 한부모 조손가정의 손자녀에게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부여
출석인정특례 적용기준 완화	현장 및 관련협회 요청을 반영하여, 최대 90일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인가증 변경절차 합리화	중요사항 변경에 포함되지 않는 해당 절차를 삭제함으로써 인가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편의를 도모
보육교직원 보수교육과정 개편	보육교직원 현장전문성 강화를 위해 최신 이슈(안전, 감염병 등)를 반영하고, 실무중심으로 보수교육과정 개편

한부모시설 이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

여성가족부는 전국 122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하 한부모시설) 운영 방식을 이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했다. 이번 시설 유형 개편안은 여성가족부가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전국 122개소의 한부모시설에 적용된다. 한부모시설은 입소자에게 주거지원과 상담·치료, 의료지원 및 부모교육과 취업지원을 제공하고, 부 또는 모가 자격증 취득 등 자립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특기적성 교육 등 양육을 지원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모자가족, 부자가족, 미혼모자가족 등 지원대상으로 구분했던 한부모시설 유형을 지원 기능 및 자녀발달 기준을 중심으로 개편하여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설 유형별로 기본 입소기간을 늘리고, 입소기간 연장 사유 또한 폭넓게 인정하는 등 한부모가족의 자립 여건 형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번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한부모가족에게 보다 질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형별 시설 종사자를 증원해 나갈 계획이다.

가족서비스 칸막이 없애고, 맞춤형 지원 늘린다

여성가족부는 12월 4일(월) 세종시 가족센터를 찾아 가족서비스 지원 현장을 살펴보고 센터 이용자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각 센터에서 대상별·개별적 수요에 따라 운영해온 취약·위기가족 서비스 지원사례를 살펴보고 내년부터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가족서비스 사업에 대한 현장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사례관리 서비스를 받고 있는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이용자를 포함하여 사업 운영 및 현장에서 지원하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종시 가족센터는 가족상담사업과 가족희망드림,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등 취약·위기가족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가족센터 관계자는 도움이 필요한 가족은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가족형태가 다변화됨에 따라 신규 서비스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용자 입장에서는 일상생활 지원과 자녀학습 지원에 대한 서비스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이용 경험을 공유했다.

여성가족부는 저출산·고령화 등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한 새로운 서비스 요구와 지역별 특성에 따른 수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서비스 간 칸막이를 없애 모든 가족들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필요한 가족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인가구, 다문화·한부모가족 등 대상별로 운영되던 기존 7개 가족서비스*를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으로 재구조화하여 상담과 사례관리를 기반으로 맞춤형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소통의 날 개최

여성가족부는 오는 12월 6일(수) 2023년 「아이돌봄서비스 소통의 날」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전국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지자체 공무원 등 400여명이 참석해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과 제도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서비스 운영관련 정보제공, 우수기관 등 장관상 시상과 우수사례 발표 등 상호 교류·협력 강화 및 격려를 위해 마련되었다. 사전행사로 마련된 '그림 속 수기 주인공 찾기'에서는 지난 6월 개최한 아이돌봄 우수 수기 공모전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가족들의 이야기를 한 화면에 담은 그림을 보며 수기의 주인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우수 수기 공모전 수상작(36명)과 서비스제공 우수 기관(35개 기관)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하였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 올해보다 32% 늘어난 4,679억 원의 아이돌봄서비스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정부지원 가구도 8만5천 가구에서 11만 가구로 2만 5천 가구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이용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많게는 85%까지 정부가 지원하였으나, 2024년부터는 처음으로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더 감면하며, 정부지원 비율도 일부 상향한다. 또한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부모는 소득기준 관계없이 요금의 10%만 부담하면 되며, 아이돌보미 처우개선과 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해 활동수당을 올해 대비 5% 인상(10,110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민간 돌봄 인력 국가자격제도와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도 추진 중이다.

고용노동부, 제15회 직장어린이집 더-자람 보육공모전 시상식 개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1월 14일(화) 15시 부산항 국제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2023년 직장어린이집 더-자람 보육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보육공모전은 직장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와 영유아가 직접 경험하며 연구 개발한 우수 보육프로그램 등을 발굴·확산함으로써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로 지난 2009년부터 개최하여 올해 15회차를 맞았다.

올해는 특히,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을 주제로 3개 분야(보육 프로그램, 공간환경디자인, 우수운영사례)를 공모하였다.

공모는 5월부터 8월까지 총 184개소가 참여하였으며, 전문가 심사와 국민 참여 투표를 거쳐 34편의 수상작이 최종 선정되었다.

함께 키우는 즐거움, 공동육아나눔터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보며 육아 노하우도 배우고, 가정의 양육 부담도 해소하는 공동육아나눔터가 400호점 개소를 앞두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역 주민센터·아파트 등 유휴공간에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육아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하며 공간 재단장과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지 등 건물에 공동육아나눔터와 작은 도서관, 가족센터 등 아동·가족관련 시설을 복합 설치하는 경우,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재단장과 운영비를 우선 지원하여 이용자 편의를 높여가고 있으며, 2018년부터 신한금융그룹과 업무협약으로 조성한 ‘신한꿈도담터 공동육아나눔터’는 2024년 200호점 개소를 앞두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내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예산을 증액하여 공동육아나눔터 40개소를 추가 설치, 총 435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